

● 민주당

환경과학기술개발로
환경선진국 실현한다

1 우리 민주당 환경정책과 목표는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쾌적성과 안정성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와같은 목표를 뒷받침하는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환경개선대책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5년 단위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당이 앞장서서 도운다.

둘째, 환경과학기술개발로 환경선진국 실현을 추구한다.

셋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힘쓴다. 이상의 3대 환경정책 기본방향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대 정책을 중점 추진토록 한다.

1. 5년 단위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쓰레기없는 주변환경을 조성한다.
2. 환경문제는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데 앞장선다.
3. 첨단환경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한다.
4.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시키도록 한다.
5. 모든 산업 경제정책을 환경정책과 연계시킨다.
6. 각종 개발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성 검토기능을 대폭 강화시킨다.
7. 환경행정조직의 위상을 재조정함으로써 환경조정기능을 강화하는데 힘쓸것이다.

2 우리당은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므로 행정부와외의 기존의 당정협의 업무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우리당이 행정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절차는 보건사회분과위원회가 주가 되며, 때로는 중요현안과 사안에 따라 당소속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입법활동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정협의 주요대상은 법률안(의원제안 법률안 포함)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안, 정부 중장기정책안,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항 및 주요 환경현안 문제는 국무총리령에 의해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본연의 임무와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3 우리당 보사분과위원장은 김한규(대구 달서갑) 의원이며, 보사위원은 강우혁(인천), 김광수(전국구), 김문기(강원 명주·양양), 김재광(전국구), 박주천(서울 마포), 송두호(부산 강서), 주양자(전국구)의원임.(예정)

4 우리당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장에는 김문기 의원이며 원내위원 7인, 원외위원 2인으로 되어 있음.

5 우리당은 13대에서도 국회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분과위원회의 활동 이외에 당소속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원내외 29인으로 구성하여 환경특위 활동으로 '90.7 경남 양산군 고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 해운대구반송동 주민의 설득과 문제점을 파악, '91.3낙동강 폐놀사고로 인한 영남지역 식수오염 실태조사 활동을 현장에서 벌이므로써 원인자 비용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도 폐놀사고 등을 고려하는 연동제 실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일상 업무의 법률안, 주요현안 사안에 대한 당정협의 외에도 환경투자의 대폭확대, 환경조직의 확대개편에도 힘써왔다.

그리고 지난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회의에는 우리당 박준병의원, 서상목의원, 안기희 환경전문위원이 참석하여 국제 질서개편의 축으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담은 「UN환경개발회의 참석결과 보고」를 작성 정부와의 당정협의에 반영하고 있다.

6 우리는 그동안 물량위주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의 질은 악화되어 더이상 환경적으로 지속 경제성장을 하지못할 구조로 되어가고 있음.

- 이제 국가나 기업은 환경에 대한 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부응하지 못할경우 모처럼 애써 쌓아올린 성장은 국제경쟁력 상실, 국내환경실태악화 등으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제까지 PPM정책에 매달린 우리는 강에서는 고기가 죽고 산에서는 나무가 고사되는 오염실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6월의 국가환경선언과 리우환경회의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산업, 생산, 소비, 무역에 있어 환경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방지시설의 투자 확대는 물론 국제 환경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로 환경비즈니스로 다시 서야 한다.
- 이러한 기업의 환경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법의 개정, 보완 이외에 폐기물관련 법률과 환경기술육성 분야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7 전 지구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이제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는 것은 자기들도 환경문제 원인자의 일부분이라는 사고를 망각하는데서 오는 소치이다.

그렇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들의 역할은 종래의 고발성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의 환경기능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기업이 법정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공동체 속에서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운동방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단체들이 보다 새로운 환경지식의 체계화, 정보화에 힘쓰고, 각 운동단체들의 공동연대 방안이 모색되어 역할분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운동을 지원해 주는 「육성법」을 제정해서라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PPM정책에 매달린
우리는 강의 고기가 죽고
산에서는 나무가 고사되는
오염실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